선진통상국가 추진과제

2005. 4. 6

재정경제부

보고순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금융 부문

외환 부문

경쟁 부문

노동 부문

기업 창업 원활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글로벌 스탠다드의 개념

- 단일화된 세계시장에서 기준으로 통용되는 국경을 초월한 약속이나 규범

공식적 표준 (de jure standard)

정부간 기구에서 채택되는 기준
(국제표준화기구(ISO) 규정)

사실상 표준 (de facto standard)

세계시장내의 경쟁을 통해서
사실상으로 통용되는 기준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의 형성

- 세계시장 참여자(정부, 국제기구, 기업, 소비자 등)들에 의해 형성

사례 1	승용차 형식승인 : 지역별로 3개 기준이 사용되다가 ECE기준(유럽)으로 통합되는 추세
사례 2	컴퓨터 운영체제 : Microsoft사의 Windows가 시장내에서 주도권을 획득

- 국제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 (1등이 독식)

금융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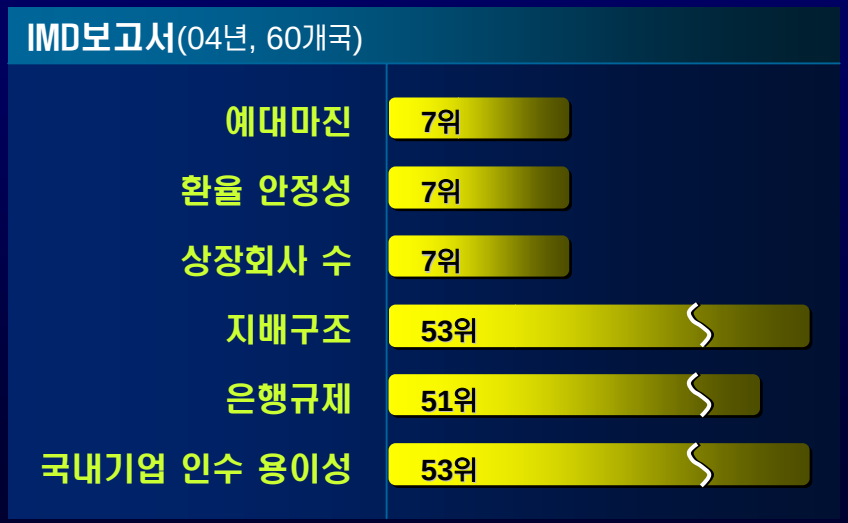
제도와 관행의 국제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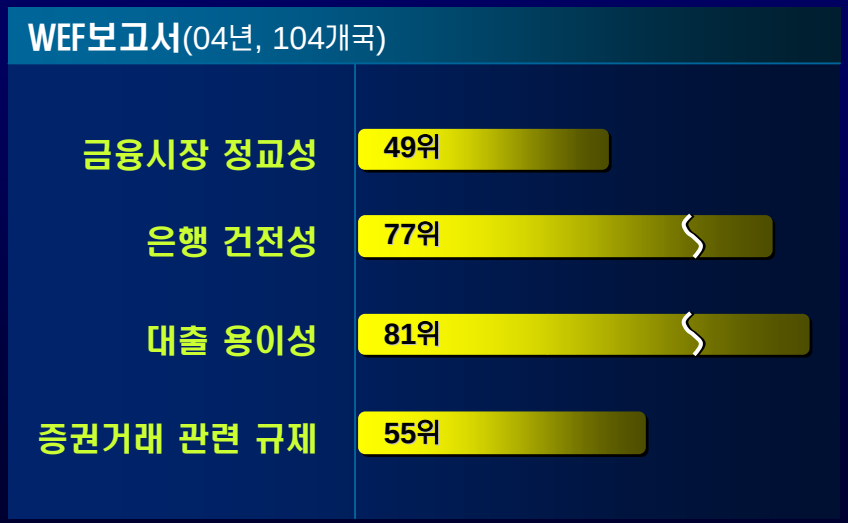
그간의 노력

- 외환위기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제도의 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
  - 기업의 의사결정과 내부통제제도 개선
  - 회계처리 투명성 강화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
  - M&A시장 관련 투명성 제고

우리의 노력에 대한 평가

- 외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국제적 평가는 다소 낮은 수준





개선추진 과제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국제화 추진

- 금융규제 전면 재점검을 통한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 지원
  -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과 사모펀드 정착 지원
  - 증권사의 신탁업겸업 허용 등을 통한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 금년중 외국인 주식투자 관련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외국인장외거래 예외허용 대상 확대 등

자본시장과 M&A시장 투명성 제고

-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제도 개선 추진
  -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높이고, 재무책임자 윤리규정 마련
- 5% Rule 보고면제대상 축소 등 M&A관련 제도 보완

중장기적으로 Negative System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법 통합 추진

- 업종간 차별적인 규제 철폐와 업무 범위의 확대를 통해 금융 산업의 균형적 발전 도모

※ 통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자본시장 관련법률의 통합을 우선 추진

외환 부문

그간의 노력

- 90년대 이후 점진적인 외환자유화
  - 주식시장 개방과 OECD가입('96년)에 따른 단계적 외환자유화 추진
  - 외환위기 이후 2차례 거쳐 획기적인 외환자유화 조치 단행

1단계 : Negative System의 도입	→	2단계 : 개인의 대외지급 확대
기업 ·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관련 외환거래		여행경비 · 해외이주비 등의 한도 폐지

우리의 노력에 대한 평가

- 점진적인 외환자유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우리 통화의 국제적 통용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안전장치 운영 중
  - 자유화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

외환 자유화 전략 →

급진적 전략	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후 일시에 자유화 (영국, 호주 등)
점진적 전략	단계적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화 충격 최소화 (일본 등)

외환 부문

개선추진 과제

- 외환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02.4)에 따른 외환자유화의 차질 없는 추진

1단계 ('02-'05)	2단계 ('06-'08)	3단계 ('09-'11)
고액 대외지급 한은확인폐지, 법인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대출 한도 확대	지정거래은행제 폐지, 외국환 은행의 자본거래에 대한 확인의무 면제 등 잔존 제한의 대폭 축소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한 외환제도 완전 자유화

-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의 개혁

외화유출억제의 외환정책기조를 완화	기존에 허용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잔존규제를 완화
외환규제 red-tape의 폐지·축소·간소화	기업의 무역거래상의 절차적 제한 등 완화
불법 자본이동에 대한 감시역량 강화	개인의 증여성 송금 등 대외지급절차 개선

- 외환제도가 다른 부문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
  - 학계 · 금융계 등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 · 운영

경쟁 부문

제도와 관행의 국제표준화

그간의 노력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중
  - 카르텔, M&A,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 경쟁제한적인 정부제도와 규제 개선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03.12) 추진

우리의 노력에 대한 평가

- 경쟁정책의 효율성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은 수준

IMD보고서(03년, 30개 국가)

호주	7.5 / 10
:	:
이탈리아	5.2
한국	5.18 (14위)
브라질	5.15
스페인	5.14
:	:
러시아	2.67

WEF보고서(04년, 104개국)

싱가포르	5.8 / 7
:	:
오스트리아	4.5
룩셈부르크	4.5
한국	4.5 (24위)
칠레	4.4
:	:
베네수엘라	2.2

경쟁 부문

제도와 관행의 국제표준화

시장경쟁 촉진시스템 구축

- 카르텔 억제를 위한 효율적 시스템 마련과 엄격한 제도 집행
- 경쟁제한적 제도와 규제발굴 · 개선
- 경쟁법 적용제외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재검토

기업집단정책의 민간자율 전환

-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따라 민간 자율규제 전환기반 구축
- '07년 평가를 통해 민간자율규제로 전환 검토

세계화 · 디지털 경제화에 대응

- 국제적인 M&A 및 카르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 IT, BT 및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경쟁환경 조성

역량강화 및 선진화 작업 추진

- 경쟁당국의 독립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방안 마련
-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선진화 작업 추진

노동 부문

제도와 관행의 국제표준화

그간의 노력

-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추진
  - 경직적인 노동관련 법과 제도 및 관행 개선
  - 사회 안전망 확대와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강화

우리의 노력에 대한 평가

- 노동 관련 법령은 개정되었으나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IMD의 경영자 대상 설문조사(2004.9)
    →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은 60개국 중 44위 수준
  - Amcham 등 주한 외국인 기업단체 평가(2004)
    → 해고 요건 완화와 법정퇴직금 제도의 폐지를 권고
  - OECD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보고서(2005)
    → GDP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조치 완화 권고

개선추진 과제

합의에 기초한 "노사관계 법 · 제도 선진화 방안" 법제화 추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 해고요건 및 대체근로 제한의 합리적 개선
- 성과주의 임금 확산 등 임금체계 합리화
- 고용보험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확충

무노동 · 무임금 정착 →
-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관행의 근절 지도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제한('07.1.1)의 정착

노사관계 인프라 확충 →
- 복수노조 설립 허용('07.1.1) 및 교섭창구의 일원화
- 직권중재제도 등 노동쟁의 조정제도 개선

외국인고용제도 개선

- 구인절차 간소화등 외국인 단순노동인력 고용제도(고용허가제)의 개선
- 1사1제도 원칙 폐지(7월중 완료), 합법체류자 재입국 유예기간 단축(1년→6월)

기업 창업 원활화

제도와 관행의 국제표준화

기업창업 용이도 국제비교 결과 (세계은행) 및 시사점

- 기업창업 비용은 OECD국가들보다 높으나, 기간은 비슷한 수준
  - 창업소요비용 : 우리나라 1인당 GNI의 18%(2,239달러) vs. OECD국가 평균 1인당 GNI의 8%
  - 창업기간 : 우리나라 22일(12단계) vs. OECD국가 평균 25일(6단계)
- 제출서류 등 경감과 창업비용 인하 필요성 시사

개선추진 과제

창업준비와 창업절차의 간소화

- 제출서류, 절차 감축과 행정기관 법정처리기한 단축
- 창업절차에 대한 One-stop Service 제공 추진

창업시 부담이 높은 창업 자본금 등 창업비용의 인하

- 법인등록세 및 최소 창업자본금을 인하 또는 폐지

법인설립 절차 이외에 인허가, 등록, 신고 등 업종별 창업절차 간소화

- 세부업종별로 과제를 발굴하여 금년 하반기중 규제개선 방안 마련